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275
- 제 안 자 : 박상혁 의원(찬성의원 29명)
- 제 안 일 : 2022년 10월 17일
- 회 부 일 : 2022년 10월 21일

2. 제안이유

- 동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2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었음.
- 그러나 본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자치구 단위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마중물 차원에서 지난 10년간 서울시에서 지원을 지속하여 왔으나, 사업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 및 논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각종 비효율이 드러나고 있는 바, 동 조례를 폐지하여 서울시 주도의 획일적 지원이 아닌,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의 마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22. 10. 27. ~ 10. 31.) 결과

- ※ 본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총 1,16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모두 조례안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임.
- ※ 입법예고 결과 외에 2022.12.13.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반대 10,584명, 179개 단체 서명분이 시민권익담당관을 통해 접수되었음.

입법예고결과 주요 의견요약서	
조 문 (폐지 조례안)	주요 의견 (모두 반대의견으로 찬성의견 없음)
폐지 조례 배경 (제안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자치구에만 떠맡길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가 자치구와 협력하여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업임. 특정 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등의 문제는 해결하고 개선할 사항이지 그것을 빌미로 사업 자체를 폐지하려는 것은 부당하며 조례 폐지 철회를 요구함. - 마을공동체 활동이 마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다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더더욱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함. 조례 폐지는 마을을 침체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임. -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은, 소외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지속되어야 함. -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의 생활권, 사회권, 참여권에 연결되는 사회적 자원이자 공동유산이라고 생각함. <p>운영상 특정단체 지원, 보조금사용 등에 문제가 있었다면 운영관리 단계에서 해당 단체에 대한 부분을 뜯어고치고 바로 세워 제대로 기능하게 함을 우선 고려해야지, 어떤 단체인지, 어떤 마을 모임인지 구분없이 잘하고 있는 곳까지 무분별하게 모든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원자체를 없애는</p>

것은 잘못된 정책과정이라고 생각함.

- 점차 자본중심의 개인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는 인간다운 삶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각 지역마다 처한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 자체에만 맡긴다면 마을 공동체 활성화마저도 양극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컨텐츠는 지역 주도로 맡기되, 예산 등 필수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이것이 필요한 마을에 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 대의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쳐주는 작은 규모의 직접민주주의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함. **마을공동체는 대의민주주의, 큰 정치가 살필 수 없는 시민들의 일상적 문제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임.**
- 하나의 큰 조례안이 아닌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 식의 방안이 더 큰 부조리와 단절을 야기할 것임.**

<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의견 >

- 조례안의 폐지와 관련해 현재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본 법인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았고,**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의 마을사업'을 위한 논의도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음.
- 특정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명분을 지속해서 내세우고 있으나, 2021년 11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수탁 기관이 **본 법인으로 교체된 사실을 무시하고 있음.**
-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의 폐지 여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되어야 하며, **관련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안정 문제 등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있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함.**
- 위와 같은 이유로 **본 법인은 관련 조례 폐지에 적극 반대함.**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문〉

서울시 마을공동체 조례 폐지 반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조례폐지안’을 철회하라!”

시민의 보편적 가치이자 권리, 마을공동체 활동

지난 2022년 10월 27일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서울시 마을공동체조례 폐지안')이 국민의힘 박상혁의원 발의, 29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에 따라 입법예고 되었다.

서울시마을공동체조례는 서울시민의 뜻에 따라 2012년 3월에 제정되어 10년간 서울시민의 마을공동체활동을 지원하는 근거였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는 지난 10년간 1만여 건에 이르는 사업을 통해 13만 명 이상의 서울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단순 친목활동, 여가생활을 넘어 내가 사는 마을 안에서 '함께 돌봄'과 '함께 성장'을 실천하며 모두에게 안전한 마을, 누구나 존중받는 마을, 이웃과 함께 오래도록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왔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에 영향을 미쳐, 전국적인 마을공동체 활동과 주민자치를 선도한 서울시민의 자부심이었다. 마을공동체 정책은 10년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이제 마을공동체 활동은 시민의 보편적 가치이자 권리이며, 지방정부가 마땅히 지향하고 지원해야 하는 시민 활동이 되었다.

마을공동체 조례폐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

폐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박상혁 의원은 서울시마을공동체조례 폐지에 대한 사유를 크게 2가지로 밝혔지만, 마땅한 근거나 논리가 없다.

조례폐지 사유는 “사업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 및 논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각종 비효율이 드러나고 있다”와 “서울시 주도의 획일적 지원이 아닌,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의 마을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례폐지 사유에서 밝힌 사업과정에서 특정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과 논란은 그 실체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폄하하기 위한 정파적 언술일 뿐이다. 마을공동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면 될 일이지 조례를 폐지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조례폐지로 자치구 주도의 마을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다. 실제 서울시민들은 이미 자치구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 다양한 마을공동체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례와 성과를 축적해왔다. 오히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정책사업 축소에 따라 자치구 마을공동체 정책이 영향 받으며 위축되고 있다. 2021년

까지 24개 자치구 마을센터가 운영되었는데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축소하자 2022년 12월 현재, 17개의 자치구 마을센터만 운영되고 있고, 23년에는 7개 자치구 센터만 남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정책 중단이 자치구의 마을자치사업의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객관적 현실이 이와 같은데 조례폐지의 근거로 자치구 주도의 마을사업 추진을 주장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마을공동체 10년 성과의 당사자인 시민을 배제한 폐지발의

지난 코로나 시기 마을공동체의 필요성은 다시금 대두되었다. 팬데믹의 시대에 시민의 고립과 단절에 대한 우려는 커졌지만, 시민들은 마을공동체의 힘으로 극복해나갔다. 코로나 국면 때 마을공동체는 스스로 마스크를 만들어 마스크 대란에서 이웃을 지켰다.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겐 직접 방역물품과 도시락 배달을 하였다. 직접 만나지 못하여도 온라인 모임을 하면서 우울과 고립감을 헤쳐 나갔다. 자발적인 모임을 만들어서 마을의 크고 작은 가게의 방역을 도맡았다. 주민자치회는 예산과 행정지원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를 열어 지역 주민 소통과 동네 문제해결에 앞장섰다. 이미 시민들은 다양하고 자발적인 마을공동체활동으로 국가적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과 긴밀히 협력하는 자치력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공동체와의 협력과 적극적 역할 배분 및 지원을 강조하는 추세임을 볼 때, 시민의 활동성과를 무시하고 서울시 마을공동체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정치 공세일 뿐이다. 정책상의 문제가 있다면 시민 당사자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조례폐지 상정에 앞서 시민공청회, 포럼, 컨퍼런스 등과 같은 시민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 조례의 주인인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서울시의회가 독단으로 조례 폐기를 상정한다면 이는 천만 서울시민을 무시하는 반 민주주의적 행태이다.

우리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조례폐지안' 에 대한 시민의견을 경청하라!!
- 하나, 서울시의회는 부당한 논리로 제시된 '서울시 마을공동체조례 폐지안'을 당장 철회하라!
- 하나,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마을공동체활동을 보장하고 지속 지원을 위한 노력을 다하라!

서울시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폐지반대시민운동본부는 입법예고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1,145명의 시민과 1만의 반대 서명운동을 해주신 시민의 뜻을 모아 오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조례 폐지 반대'의 의지를 밝힌다.

2022년 12월 13일(화)

서울시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폐지반대시민운동본부

5. 검토 의견

- 본 폐지 조례안은 2012년 3월 15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당시 조례명: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으며,
- 2020년 7월 16일 전부개정을 통해 명칭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동 조례 제12조(지원범위)에서 적시한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자원을 이용한 공동체 기반 경제 활동 지원,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해 왔음.

〈마을공동체 사업 개요〉

1.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개요

- 센터 업무 개시일 : 2012. 8. 23.(사단법인 마을 최초 수탁)
- 운영방식 : 민간위탁(예산지원형, 사무형)
- 수탁기관 :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 위탁기간 : 2021.11.21. ~ 2022.12.31. (약 1년 2월)
-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3층(753.13㎡)
- 조직 및 인력 : 1국 5팀 정원 30명 ('22.9월 기준 현원 27명)

【 2016~2022년 연도별 인력현황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계	57명	59명	57명	58명	50명	42명	30명
정 원	27명	29명	29명	30명	30명	30명	30명
비정원	30명	30명	28명	28명	20명	12명	0명

○ '22년 민간위탁금 : 2,810백만원

- 인건비 1,783백만원, 운영비 305백만원, 사업비 717백만원, 일반관리비 5백만원

○ 위탁사무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실행 지원,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관리
-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 강화,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2. 자치구 마을생태계(중간지원조직) 지원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2조

○ 지원대상 : 24개 자치구 ※ 중구 :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 미추진

○ 지원규모 : 3,120백만원(구별 130백만원) *중간지원조직 형태 구분 없이 균등 교부

○ 추진체계 : 시 → 구 → 자치구마을센터로 예산교부

○ 사업내용 : 자치구 공모사업 및 기반조성사업 추진

- 공모사업 : 3인 이상 주민모임, 지역단체 등 참여로 지역문제 해결

※ 기존 단체 위주 참여방식 → 참여시민 모집 통한 사업실행단 구성·운영방식으로 전환

- 기반조성사업 : 공동체 활성화 촉진을 위한 교육, 컨설팅, 홍보 등 추진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 현황 (24개구)

(‘22. 10. 20. 기준)

구 분	직영	민간위탁
개수	7개구	17개구
해당구	서대문구, 양천구, 동대문구, 강서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그 외

자치구 마을센터 주요기능

구 분	내 용
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 및 지원	- 직접지원: 실시계획, 사업설명회, 심사 및 선정, 보조금 지급, 회계정산 및 결과보고서 취합 - 간접지원: 선정자교육, 상담 및 컨설팅, 모니터링, 회계지원
② 마을지원활동가 관리·지원	- 마을지원활동가 선발, 활동교육 및 성장지원 - 일반마을상담, 공모사업상담 및 모니터링, 컨설팅, 교육연계
③ 교육·연구	- 대상별교육: 공무원, 주민, 마을사업지기선정자, 마을활동가, 마을지원활동가, 내부실무자 등 - 형태별교육: 마을탐방·사례, 마을공동체의 이해, 마을공동체 유관정책, 보조금집행 지침 등 - 연구: 지역자원조사, 중장기 비전 연구 등
④ 협력사업	- 민관협력(자치구행정, 관계부서, 의회 등) - 대외협력(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복지관, 혁신교육사업, 자원봉사, 협치, 참여예산 등)
⑤ 행사 및 홍보, 아카이빙	- 마을박람회, 마을축제, 마을포럼개최 등 - 뉴스레터, 홍보물제작, 찾아가는 홍보 설명회 - 기록: 활동기록, 마을사업통계, 사업결과자료집제작등
⑥ 네트워크 형성	- 동별, 권역별 네트워크 - 의제별 네트워크 육아, 문화예술, 생활예술, 공간, 청년 등
⑦ 서울형 주민자치회 지원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신규구성 및 분과구성 기획총괄 - 자치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등 - 자치구청 및 동주민센터 민관협력 촉진 - 자치구 주민활동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 모니터링 - 주민자치회, 동자치지원관 등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3.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지원

마을활력소 운영 현황

- 운영 중(53) : 市 민간위탁 2, 區 자체운영 51
- 조성 중(2) : 區 조성 2(공사 중 1, 설계완료 1)
- 기 타(7) : 사업종료 3, 사업철회 2, 시설폐관 3

공간 조성

- 사업내용 : 마을활력소 공사 및 설계용역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 유형별 분류 및 지원기준

유형	찾동형	거점형	마을공동체형		
			자치구형	모두의공간	
				매입형	리모델링형
특징	주민센터·자치회관 내 유휴공간 개선	區 공동체공간 활성화 지원 복합 기능공간	區 공간확보, 市 조성비 지원 → 區 주민단체 공모	주민단체의 역량이 높고, 마을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市·區가 주민과 함께 공간 조성	
조성주체	區	區	區	市 (부지매입, 조성공사)	區 (리모델링비 지원)
추진방법	區 신청접수 → 조성협의(市·區) → 사업비 교부(市·區) → 공감워크숍 → 공간운영	區 신청접수 → 조성협의(市·區) → 공감워크숍 → 사업비 교부(市·區) → 공간운영	사업비 교부(市·區) → 주민단체 모집 → 공감워크숍 → 공간운영	운영주체 공모 → 간접지원(역량강화) → 공간조성 (부지매입, 조성공사)	운영주체 공모 → 간접지원 → 사업비 교부(市·區) → 공간조성(리모델링)
예산과목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시설비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지원규모	최대 2억	최대 29.7억 (차등보조율 적용)	리모델링형(2억 내외) 신축형(16.5억 내외)	25억 내외	최대 2.5억
공간규모	주민센터 내	500㎡ 이상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운영주체	주민자치회 등	區 마을자치센터	비영리 민간단체, 주민협의체 등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 민간단체 등
시설수	운영 13	운영 5, 조성중 1	운영 33, 조성중 1	중단 3	운영 2

운영 지원

- 사업내용 :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성 경비, 컨설팅 등
- 지원기준

구분	사업비	인건비성 경비	공감워크숍
지원대상	개소 후 5년 내 마을활력소 (찾동·마을공동체형)	개소 2년 내 거점형 마을활력소	찾동·거점형·마을공동체형 마을활력소
지원규모	연간 최대 5백만원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반영)	2명 채용 시 시비:구비=50:50 지원 거점형 마을활력소 전담	1개소당 최대 11백만원 내외
주요내용	마을활력소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인력 인건비	1개소당 5~10회 실시

○ 기타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BI 공유 :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을활력소 현판 지원(1개소당 3백만원)
- 공간이음 : 공동체공간에 대한 종합적 정보제공 목적의 공간 누리집
- 공간유지·관리 : 일부 마을활력소의 대부료,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등 지원

※ 마을활력소 운영현황

※ '22.10.20. 기준

구분	운영형태	소재지	시설명	개관시기	비고	
운영중 (53)	市 위탁운영 (2)	강 북 구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19.12.	마을공동체형	
		마 포 구	마포 마을 활력소	'18. 7.	마을공동체형	
	區 직영 (39)	중 구	다 산 마 루		'20.10.	찾동형
			성 동 구	금 호 1 가 동 함 께 보 고	'16. 1. '17. 5.	찾동형 찾동형
		광 진 구	고 랑 울 림		'19. 7.	찾동형
			중 랑 구	상 봉 마 중 겸재마중(공동체주택) 망 우 마 중	'18.11. '21. 9. '22. 3.	마을공동체형 마을공동체형 거점형
		성 북 구	문 화 공 간 이 육 사		'19.12.	마을공동체형
			길 음 아 지 트		'22. 2.	마을공동체형
			정 릉 함 동 지		'22. 9.	마을공동체형
		노 원 구	수 락 행 복 발 전 소		'18. 5.	마을공동체형
			도 압 어 울 마 루		'21.11.	마을공동체형
		은 평 구	고 리 마 루		'18. 6.	찾동형
			토 정 골 사 랑 방		'19. 1.	마을공동체형
			한 옥 마 을 회 관		'18. 1.	마을공동체형
		강 북 구	어 울 향 기		'19.12.	찾동형
		도 봉 구	은 행 나 루		'16. 2.	찾동형
			학 동 지		'17. 7.	찾동형
			창 오 랑		'18.12.	마을공동체형
		서대문구	천 연 응 달 샘		'17. 3.	마을공동체형
			나 비 울		'18. 6.	찾동형
		양 천 구	용 왕 산 숲 속		'17. 2.	마을공동체형
		구 로 구	천 왕 역 버 들		'17. 5.	마을공동체형
			다 붓 다 붓		'18.11.	마을공동체형

구분	운영형태	소재지	시설명	개관시기	비고
		동작구	모아래	'20.11.	마을공동체형
			대방누리마루	'18. 6.	찾동형
			보라매동지	'18.12.	마을~공동체형
			사이좋은	'19. 7.	마을공동체형
			꽃담소	'21.11.	마을공동체형
			사랑동지	'22. 7.	마을공동체형
		금천구	독산4동	'15.12.	찾동형
			맹골맹골	'17. 1.	찾동형
			새재미	'17. 6.	마을공동체형
			늘솔나루	'21. 5.	마을공동체형
		영등포구	문래목화	'18. 7.	찾동형
		강동구	성내어울터	'18.10.	마을공동체형
			모두마루	'18. 9.	마을공동체형
		송파구	송파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22. 3.	거점형
		강남구	강남애(愛)그린	'22. 6.	마을공동체형
	區 위탁운영 (12)	성동구	사근동	'19. 2.	마을공동체형
		동대문구	회기한지붕	'18.12.	마을공동체형
			휘경아뜰리에	'18.11.	마을공동체형
		노원구	중계온마을센터	'22. 2.	거점형
		도봉구	산돌	'21. 1.	마을공동체형
			창이마을꿈터	'21. 1.	마을공동체형
도봉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22. 4.	거점형	
초록뜰			'19. 6.	마을공동체형	
금천구		어울샘	'18.10.	마을공동체형	
영등포구		대림2동 주민공동이용시설	'17. 9.	마을공동체형	
강동구	천호동 거점형 마을활력소	'20. 7.	거점형		
강서구	종해문화	'22. 7.	마을공동체형		
조성중 (2)	區 조성 (2)	중랑구	어울림마당	-	마을공동체형
		성북구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	거점형

※ 출처 : 행정국 제출자료

○ 본 폐지 조례안은 사업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 등 논란이 있어온 상황에서 서울시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보다,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영하여 발의된 것으로 보임.

※ 행정국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자치구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마중물 차원에서 지난 10년간 서울시에서 지원해왔으며, 그간 사업과정에서 많은 비판과 논란이 지속되어 온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의 마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으로, 폐지조례안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마을공동체사업 등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 ▷ 마을공동체사업에 2021년 기준 약 3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2012년 이후 2021년 현재까지 약 10년간 2천 2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지역공동체과 예산액 기준)
-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에서는 ~중략~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서마중') 등 마을공동체사업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어 '21년 연간 감사기본 계획에 따라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 서마중은 갑 연합에 근거없이 예산과 사무실 공간 및 인력을 부당 지원함으로써 약 4억 6천만 원의 특혜를 제공하는 등 **총 41건의 위반사항을 지적한 바 있음**(별첨 참조).

※ 출처 : '마을공동체사업 등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2022. 7. 감사담당관)

○ 동 폐지조례안은 사업 초기부터 10년간 시 주도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 및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각 자치구 여건과 수요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 2019년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분석평가 자료에서도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함.

I 자치구 특성 반영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정책기획 지원

기존 사업 추진결과 반영한 통합 공모사업 기획 권장

- 자치구별 특성에 따라 단계별, 주제별 공모사업 구성 비율을 설정
 - 2017년부터는 자치구가 자체 사업과 서울시로부터 이관받은 사업을 바탕으로 통합 공모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해서 추진
 - 서울시는 자치구가 통합 공모사업을 기획할 때 기존 사업 추진결과를 반영해 단계별, 주제별 사업 구성 비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권장
 - 사업 건수와 참여자가 적은 자치구는 모임형성 지원 단계 사업과 간접지원을 적극 추진해 저변 확대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
 - 사업 건수와 참여자가 많은 자치구는 모임형성 지원 단계에 해당하는 자체 사업보다 서울시가 주로 추진했던 활동 지원, 공간 지원 단계 사업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적절

※ 출처 : 2019 서울연구원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 반면, 서울시가 수행하던 컨트롤 타워 역할 부재로 인한 사업의 혼선과 자치구별 사업 추진역량 및 추진의지의 차이로 인한 사업 양극화 현상, 행정의 신뢰성 훼손 등의 우려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종료 반대 민원 및 고용승계 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는 바,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입법예고 결과 참조

- 특히,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사업추진 역량이 부족한 자치구에서는 사실상 사업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만큼,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장기적으로 서울시의 역할을 재설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결국, 동 조례안의 폐지 여부는 자치구 주도로의 사업 재편으로 인한 사업 효과성 제고 측면과 서울시 역할 중단에 따른 사업동력 상실 우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종료로 인한 행정의 신뢰성 훼손 가능성 및 고용승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본 조례폐지 시행일을 안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려 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와 마포 마을활력소 민간위탁 기간종료가 각각 2023년 1월 8일과 2023년 2월 13일까지 되어 있는 바, 행정 신뢰성을 위해 시행일을 민간위탁 종료 시점에 맞출 필요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행정국은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와 마포 마을활력소의 위탁종료 기간까지의 민간위탁금은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에 4천 1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폐지 시행일 이후에도 일반조례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 일반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개별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개별법률에 위임 근거 규정이 없을 때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을 위임의 직접적 근거로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을 살펴볼 때, 일반조례 역시 민간위탁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⁴⁾

※ 참고판례: 대법원 1995.7.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 출처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6페이지

전문위원	김정덕	입법조사관	이태기
------	-----	-------	-----

(참고자료)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연도별 주요성과

[2012년]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및 개소
 - 공모결과 : (사) 마을 수탁기관 선정
 - 위탁기간 : '12.8.23. ~ '15.8.22.

[2013년]

-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 크게 증가
 - 사업신청 건수 : '12년 대비 233% 증가 ('12년 957건 → '13년 2,233건)
 - 소규모 주민모임 증가 : '13년 2,233건 중 주민모임 1,509건(68%)
- 마을생태계 지원을 위한 6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

[2014년]

- 주민의 등장과 성장 : 70,000여 주민 참여, 2,700여 모임 형성
- 마을생태계 지원을 위한 18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

[2015년]

- 이웃과 마을 재인식 기회제공 및 공동체 모임 발굴 : 130,000여 주민 참여, 3,500여 모임 형성
-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민간위탁기관 재계약 추진
 - 수탁기관 : (사)마을
 - 위탁기간 : '15.8.23. ~ '18.8.22.
-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을활력소 누적 1개소 운영

[2016년]

-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자와 주민의 만족도 증가 :
'12 ~ '16년까지 참여시민 13만명, 주민모임 4,306개 형성
- 마을생태계 지원을 위한 25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
-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을활력소 누적 3개소 운영

[2017년]

- 마을생태계 지원을 위한 25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
 - 실무인력 확충(2.8명 → 4명), 민간위탁형 전환 권장 ('17년 7개)
-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을활력소 누적 11개소 운영

[2018년]

-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민간위탁기관 재계약 추진
 - 수탁기관 : (사)마을
 - 위탁기간 : '18.8.23.~ '21.11.20. (90일 연장 포함)
-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을활력소 누적 27개소 운영

[2019년]

- 마을생태계 지원을 위한 24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 :
민간위탁 20개구, 단체 4개구, 직영 1개구
-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을활력소 누적 35개소 운영
- 청소년·청년의 마을활동을 위한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조성 : 강북구

[2020년]

- 마을생태계 지원을 위한 24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 :
민간위탁 22개구, 직영 1개구, 민간보조 1개구
-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을활력소 누적 38개소 운영

[2021년]

-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민간위탁기관 공모 추진
 - 공모결과 : 기존 (사) 마을 → 공모 후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 위탁기간 : '21.11.21.~ '22.12.31.
- 마을생태계 지원을 위한 24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 :
민간위탁 23개구, 직영 1개구
-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을활력소 누적 44개소 운영

[2022년]

- 마을생태계 지원을 위한 24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지원 :
민간위탁 17구, 직영 7개구
-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을활력소 누적 53개소 운영

※ 출처 : 행정국 제출자료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최근 5년간 추진실적 〉

2018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 정책연구 및 활동가 역량 강화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제도화 연구, 성과 연구, 마을살이 작은 연구 추진(15건) /정책웹진(3회, 13,717명 발송) /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전문 마을활동가 성장 교육 준비 등 ○ 마을공동체 활동가 역량강화 : 마을실천대학 뿌리과정 등 42건, 교육 콘텐츠 제작 1종, 교육이수 관리시스템 구축, 교육관련 연구 추진(2건)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운영 지원, 관련 연구 추진(5종), 마을활동가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11개 과목), 업무매뉴얼 개발(2종) ○ 마을공동체 홍보 전파 : 뉴스레터(온라인 14회, 오프라인4회), SNS 281개 게시, 서울마을주간(9월), 마을밥차 운영 12회, 외부기관 공동사업 16건 추진 등 ○ 청년 아이디어 발굴 지원 7건,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사업 추진(14개 대학), 우리마을지원사업(공간) 운영을 위한 마을활력소 지문 12개소 등 ○ 중간지원조직 협력지원(30회), 실무역량강화 교육(5회, 241명) 및 네트워크 지원(21회, 389명), 현장 모니터링(10회), 지역기반 학습체계 매뉴얼 개발 중(한국정치학회), 마을사업 DB 구축·분석 중,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활력소 2개소 선정, 워크숍 및 간담회(7회)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운영 : 찾동 마을분야·주민자치회 사업지원 [공론장 27회, 찾동 교육 TFT 25회, 연구보고서 제작 1종 등]
2019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 정책연구 :연구 과제 10종 (정책연구 4종, 제도화연구 5종, 성과연구 1종) ○ 마을공동체 활동가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활동가 성장교육, · 중간지원조직 교육담당자 네트워크 협의회 - 청년마을활동가 성장교육 : 지역혁신청년활동가 35명 및 협력사업장 22곳 ○ 마을공동체 홍보전파 : 홍보콘텐츠제작(온라인(12회), 오프라인(138,000부), 대외협력 연계망 구축(워크숍, 회의 등(20회)), 마을나눔밥차(12회 9,600명) 등 ○ 서울형커뮤니티거점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공간활성화 지원: 찾동마을활력소 워크숍 및 간담회(3회), 현장 모니터링 4회, 공동체공간 자산화 기반 마련을 위한 간담회 3회 등 - 서울형커뮤니티 활성화 : 주축조직 발굴 및 실행(6건), 사업홍보 및 사업홍보 및 사례 확산(3건) ○ 동마을자치 생태계 조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자치조성지원 : 자치구 찾동추진지원단 정례회의(30회), 설명회 및 현장 지원 등(197회), 사례 기록 및 분석보고서 발간 등 - 전문인력교육개발 및 운영 : 마을계획 전문인력 교육 및 지원(8회, 71명), 주민자치 전문인력 교육 및 지원(11회, 285명) ○ 새로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로컬랩 : 금천구 독산1동, 가산동, 강북구 삼양동 대상 문제해결 모델 및 실천방법 개발

<p>2020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 정책연구 :연구 과제 5종 추진 ○ 마을공동체 홍보전파 : 홍보콘텐츠제작(12회), 마을주간(9.24~9.30.)운영 등 ○ 마을활동가 교육 및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활동가 성장교육(설명회 20회, 뿌리10회,전문과정8회, 리더십5회, 자주학습7회) - 마을일자리 : 뉴딜일자리50명, 공공일자리 28명, 공론장코디네이터 운영 26명 등 ○ 자치구 마을자치 생태계 조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지원조직 협의회(52회), 현장지원 방문(27회), 마을생태계모니터링(24회) 등 - 마을자치 아카이브 구축(2건), 마을 및 주민자치, 찾동 실무자 교육(23건) ○ 서울형 커뮤니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발전소 : 근린단위 주민참여 생태계 구축과 지역의제 해결(5곳/현장지원 56회) - 공동체공간 활성화 지원: 마을활력소 운영지원(모니터링 3회, 컨설팅12회), 자산화 지원사업 등
<p>2021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 정책연구 : 연구 3종, 성과보고서 1종, 정책리포트 3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연구 등 3건 추진 - 센터 통합 성과보고서 1종, 마을자치 정책리포트 3종 추진 ○ 마을공동체 홍보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레터 11회 발간, 109천여건 온라인 배포 - 서울마을주간 1회, 마을학술대회 1회, 마을밥차 3회, 업무협약(MOU) 체결 12회 ○ 3기 기본계획 전략 수립 및 협력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지원조직 센터장 모임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28회, 전국단위 네트워크 17회 - 그린뉴딜 지역화전략 정책 토론회 등 17회 추진, 공론장 운영 14회, 정책조사 1회 등 ○ 마을자치실천대학 운영 : 리더십 과정 등 9개 과정 46회 운영, 교육콘텐츠 개발 4종, 마을 교육 아카이브 3종, 마을형 일자리 모델 개발 3종 등 ○ 자치구 마을자치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지원조직 운영 49회, 주민연대 모임 활동지원 4회, 현장 지원 30회 등 - 마을생태계 실무협의 6회, 현장방문 및 워크숍 8회 등 ○ 서울형 커뮤니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활력소 운영 지원 1회, 공동체공간 자산화 지원사업 23건 지원 등

<p>2022년도 (1~10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활성화 전략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 2개소 발굴, 사업설명회 3회, 지역자원연계회의 33회, 현장사업 운영 19회 ○ 서울시간은행 국민대·정릉지점 신규 운영 : 개인회원 수 155명 등 ○ 공동체 기반조성을 위한 대내외 네트워크 협력 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마을센터장 및 주민자치 사업단 연석회의 19회, 주민자치회장단 회의 15회 등 - 마을공동체 관련 현장연구 1종 추진 ○ 소통 및 정책 확산 추진 : 뉴스레터 10회, SNS 게시물 399건 ○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살천대학 : 마을인문학 3강, 이슈특강 3강, 입문과정 4강, 역량별 전문과정 21회 - 구 실무자 기본교육 49명, 직무교육 142명, 교육연계망 구축 6회, 콘텐츠 개발 1회
---------------------------	---

※ 출처 : 행정국 제출자료

〈마을공동체 사업 등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 내역〉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이하 다음의 약칭을 사용함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서마중

관련기관	처분요구제목	처분유형	조치할 사항	조치현황
시민협력국 (자립공동체과) 서 마 중	특장단체에 근거 없는 회비 납부 및 공간과 인력 등 부당 지원	주의요구 주의요구	①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협약서 및 관련 규정, 지침 등에 부합하게 추진하는 등 수탁사무 관련 업무 철저 ② 매년 예산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 시 협약서와 관련 규정,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기 바라며,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 철저	조치 중
시민협력국 (자립공동체과) 서 마 중	이중계약에 따른 예산낭비 등 정채리포트 사업 운영실태 미흡	주의요구 동 보	① '○○○○○○○○○○'의 지적재산권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안 및 다양한 손해 회복 방안 마련 ② 앞으로 이중계약으로 인한 집필비 낭비 사례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업무처리 철저 × 서마중 관련자 신분상 조치	조치 중
시민협력국 (시민참여과) 자립공동체과 행정국 (인사과)	개방형 임기제 부서장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주의요구 주의요구 동 보	① 향후 소속 직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다른 직무 겸직을 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 시행 ② 향후 사적 이해관계 있는 직무관련자가 채용되어 불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방형직위 계약직공무원 채용 등 관련 업무처리 철저	조치 중
시민협력국 (자립공동체과) 정책기획관 (조약담당)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부적절	주의요구 (기관경고) 동 보	① 향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시 공정성 및 재관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 철저 ② 향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평가 시 민간위탁 유형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 주관부서에 기관경고 조치	조치 중

관련기관	처분요구제목	처분유형	조치할 사항	조치현황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서 마 중	강사로 등 과다지급 부적정	주의요구 주의요구 동 보	① 불충족된 강사 등급으로 과다 산정되어 지급한 강사로 및 원고로 등 부적정하게 과다 지급함으로써 서울시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 회복 방안 마련 ② 향후 지급기준 강사 등급 이상 강사로 과다 지급하거나 지급기준 대비 과다 산정되어 과다 지급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철저	조치 중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서 마 중	행정지원시스템 운영권리 소홀 및 불필요한 계약으로 예산 낭비	주의요구 주의요구	① 이미 구축이 완료된 행정지원시스템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불필요한 자문료와 중복성이 있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등 수탁사무 관련 업무 철저 ② 수탁기관이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 철저	조치 중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서 마 중	자세 회의실 등 공간이 있음에도 외부공간을 대관하여 예산 낭비	주의요구 주의요구	① 사업추진 시 외부공간 대관이 필요한 경우 내부 시설 및 공공장소를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등 수탁사무 관련 업무 철저 ② 수탁기관이 사업추진 시 불필요한 외부 공간 대관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 철저	조치 중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서 마 중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한 정보화 용역의 사업관리 부적정	주의요구 주의요구	① 앞으로 업무추진 시 「지방계약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의 관리·감독 철저 ②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위 수탁협약서」에 따라 수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조치 중
서 마 중	지방계약법 등의 절차를 위반한 계약 업무 추진 부적정	주의요구	앞으로 계약 업무 추진 시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지방계약법 절차 준수	조치 중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서 마 중	민간위탁금 사업비 속 인건비 및 국외이비 편성 부적정	주의요구 주의요구	① 향후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② 향후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철저	조치 중

관련기관	처분요구제목	처분유형	조치할 사항	조치현황
시민협력국 (자력동행과)	민간보조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 부적정	주의요구	향후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	조치 중
시민협력국 (자력동행과) 서 마 중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한 예산 편성 업무 추진 부적정	주의요구 주의요구	① 앞으로 예산 업무 추진 시 예산과목의 중복편성 등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관련 규정 준수 ②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수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조치 중
시민협력국 (자력동행과) 서 마 중	市 한시적 지원사업을 연장하여 인건비 등 추가 지원 부적정	주의요구 주의요구	① 서울시에서 정한 지침에 부합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탁사무 관련 업무 철저 ② 수탁기관이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부합 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 철저	조치 중
시민협력국 (자력동행과) 서 마 중	수탁사무와 무관한 일자리 개발 사업으로 예산중복 지원 및 낭비	주의요구 주의요구	① 법인·단체·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수탁사무 관련 업무 철저 ② 수탁기관이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부합 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 철저	조치 중
시민협력국 (자력동행과) 서 마 중	마수료자에게 연구비 지급 등 마을실천대학 운영 미흡	주의요구 주의요구	① 민간위탁금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업추진 시 사업 취지에 부합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탁 사무 관련 업무 철저 ② 수탁기관이 사업 취지에 부합하게 사업을 추진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 철저	조치 중
☆☆☆	☆☆☆ 마을자치센터 직원 채용 부적정	주의요구 동 보	① 수탁업체 前 센터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수사의뢰하는 방안 마련 ② 앞으로 수탁기관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면접점수 조작 등 공정한 채용절차를 위반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	조치 중

관련기관	처분요구제목	처분유형	조치할 사항	조치현황
☆☆구	☆☆구 마을자치센터 예산 중복지출로 예산낭비	시정요구	부적절하게 지출한 유지관리 비용 1,440천 원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예산 낭비 사례 발생지 않도록 조치	조치 중
○○구	○○구 마을자치센터 직원 공개 채용 절차 부적절 및 배임혐의	주의요구 동 보	① 앞으로 수탁기관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청렴서약서 및 공정한 채용절차 위반 등 동일 사례가 발생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 ② 수탁기관 임직원의 지방재정법 및 업무상 횡령의 죄에 대한 약식 명령이 확정 되었으므로, 「위수탁협약서」 제19조 제2항 등 규정에 따라 협약해지	조치 중
◇◇구	◇◇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직원 복무관리 소홀	주의요구 동 보	① 부적절하게 지급한 2개월분의 급여 중 20%에 해당하는 984,920원을 반환받는 방안 마련 ② 앞으로 수탁기관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	조치 중
□□구	마을활력소 운영 부적절 및 근접거리 내 마을활력소 중복구축	주의요구 동 보	① 앞으로 마을활력소가 전시공간 외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매뉴얼 작성 및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영 철저 ② □□구 △△동에 조성중인 거점형 마을 활력소 구축 과정에서 인접거리에 既 조성된 마을활력소 와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에 대한 기능(역할)이 중복되므로 향후 예산낭비 제거 방안 및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조치 중
서울시☆☆	업정한 계약심사업무로 민간 위탁예산낭비 방지에 기여	동 보 (모범사례)	계약심사 과정에서 수탁업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없이 포함된 감의 활동비 총 18,000천 원 등 137,802천 원을 삭감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의 표창대상자로 선정	조치완료

※ 출처 : '마을공동체사업 등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2022. 7. 감사담당관)